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정부, 외화유동성 대책 마련 중

- 최근 국제적 금융불안,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외화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근원적인 전방위종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 -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으며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.
 - 따라서 급격한 외화 유출입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가중되는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단계 외화건전성 제고조치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 - 28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 발생 때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.
 -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터뷰를 통해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 방안과 은행세 도입에 관하여 언급함.

- 정부는 한국은행,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(TF)를 통해 선물환 거래규제 신설, 외화부채 비율규제의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적용, 은행세 도입,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등의 외화유동성 규제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자기자본 대비 외화부채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를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.
 -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거래 한도를 국내은행은 50%,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250%로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 - 외화차입 등 비핵심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G20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결정 후 국내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도 유동성 규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음.

(외환시장 안전판 강화, 전방위 대응책 등, 연합뉴스 외 다수, 6/2)